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현황 및 정책방향



김 낙 빈 환경부 환경기술과장

☎ 02-2110-6723 nbkim@me.go.kr

필자약력

- 2000. 9~ 한강유역관리국장
- 2001. 7~ 법무담당관
- 2004. 3~ 산업폐기물과장
- 2005. 8~ 유역제도과장
- 2005. 12~ 전주지방환경청장
- 2007. 3~ 환경기술과장

■ 들어가는 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울산·여수·시화지역의 VOC 및 악취문제, 대구지역 염색폐수, 팔당·충주호 등 상수원 유역 비점오염원 등과 같은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한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해, 그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 내 환경전문가(대학·연구소·기업체 등)들의 참여하여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급과 산업체 지원·육성하고자, 1998년 산업단지로서 오염문제가 심각했던 울산·전남(여수)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 부산·서울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 시·도 단위로 총 18개소(경기 3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 센터들은 지역 내 산·학·연·민·관 등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구성하고 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현황

년 도	1998	2000	2001	2002	2005
18개소	2개소 (울산, 전남)	8개소 (강원, 인천, 대구, 경기, 시흥, 안산, 충남, 대전)	5개소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광주)	1개소 (제주)	2개소 (부산, 서울)

■ 지역 환경기술 개발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들이 2~3백년에 걸쳐 이룩했던 산업화를 30여년간의 압축 성장을 통해 이룩하였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에 다양하게 표출되어 환경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환경기술 개발노력과 정책적인 대응없이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1995년부터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제정,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05)신설 등 지역개발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3년간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사업 정비 등의 지속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술혁신 거점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산업·과학기술부분과는 달리 지역별로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 환경 분야는 지역거점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기준이나 환경기준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기가 곤란하여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대학, 행정기관, 연구소,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 문제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추진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 균특회계 중 기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과학기술부의 R&D분야 중기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 등을 거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추진체계,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의 평가부문에서 우수(A등급)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03.8월)하였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목표는 지역의 환경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기술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거점센터로의 육성에 있으므로 동 목표의 달성여부를 단기간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주관대학, 참여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seed money로 하고,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을 부담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아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이 크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센터의 설립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민간부담금
합 계	1,176.46	395.43	369.89	411.14
2005년까지	822.20	259.30	253.20	309.70
2006년	178.97	64.00	57.09	57.88
2007년	175.29	72.13	59.60	43.56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그간 운영결과 지역환경 문제해결 등에 대한 지역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2006년도의 경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18개 센터에 대해 6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부 R&D사업 자체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다.

그간 지역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06년까지 총 1,255개의 연구 및 지역특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학계 등에 제공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관련 기업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성과의 검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및 환경신기술 획득을 유도하는 등 연구개발기술의 산업체 현장적용 및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전문적 기술인력이 부족한 지역기업체의 환경애로사항을 기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내 산·학·연 환경전문가 2,325명으로 기술지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717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2,137회의 산업체 공정진단 및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체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환경관련학과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환경관련 기업체에게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제공하고자 2005년에 이어 환경산업현장 인턴십사업을 2006년에도 실시한 결과 141개 기업과 270명의 환경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실무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하였고, 참여 연수생 중 70명이 연수기업 및 유관기업에 취업하였다.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6일에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에서는 지역센터간 중복과제의 조정과 유사과제의 성과 공동 활용연계 등 사전협의를 통한 연구사업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환경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술혁신 거점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산업·과학기술부분과 달리 환경분야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민·관이 결집하여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역의 환경기술 역량 강화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과를 직접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환경정책 반영,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연구인력에 의해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내 관련 전문가로 “기술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환경오염방지과 관련된 기술적,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환경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사전오염예방체제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학생, 환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역환경보전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역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하여 환경신기술 전파·보급, 환경정보 공유 및 교류, 연구성과 확산하며, 대학의 환경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장학습경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맺음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기술 개발은 현안 환경오염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국제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방분권,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에 발맞추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산·학·연이 연계한 지역환경연구 지원 및 자율환경관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